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2024년 11월호】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5(24-11) | 2024. 11. 1

‘자유 통일’을 위한 향군의 역할
문성목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 확충 및 혁신 제언
윤진영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의와 각오
이영석

‘자유 통일’을 위한 향군의 역할

문 성 목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통일 독트린’을 공표했다. 그는 3·1절 기미 독립정신은 ‘자유’이며, 지금 한반도의 반쪽만 자유를 누리고 있기에 남은 반쪽에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참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기미 독립정신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자유의 빛이 군사분계선 이남에만 비추고 있기에 북녘 땅까지 빛이 비치는 그날이 바로 광복의 완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은 작년 말부터 남북관계는 동족이나 동질의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관계이며, 대한민국을 주적,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끊어내기, 통일 지우기에 혈안이다. 김정은이 소위 2개 국가론을 내세우는 것은 정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노림수이다. 그가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제재와 잇단 자연재해로 주민들 대부분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잘사는 남한에 대한 부러움, 한류에 대한 동경심 등은 자칫 김씨 세습 정권과 체제를 뿌

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소위 3대 악법 제정으로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무인기 소동 등 전쟁 분위기를 끌어올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을 차단하려는 꿈수다. 10월 15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연결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는 만행을 벌인 것 또한 북한 주민과 군인의 탈북을 막아보려는 고육책이다. 김정은이 통일 지우기를 하고 있지만, 핵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초토화, 영토 평정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어 무력적화통일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 통일은 헌법적 가치, 북한 주민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광복의 완성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6조 ③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 통일은 헌법적 명령인 동시에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명제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윤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 통일은 김정은에게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다. 지금 김정은은 겉으로는 ‘통일 지우기’ 운운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김정은은 얼마 전 국방종합대 연설에서 남녘해방이나 무력통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서울도 핵과녁이다. 초토화시켜야 한다”며 핵을 이용한 무력적화통일을 노골화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으로 혈맹을 공고히 하려 한다. 이 또한 무력통일과정에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꿈수로 보여 진다. 김정은의 불순 의도를 좌절시키는 길은 바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이다. 자유 통일은 최고의 안보전략이다. 안보를 위협하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핵 무력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김정은 정권을 소멸시키고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성취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국가 안전보장과 민족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향군의 책무

향군은 대한민국 최고·최대의 안보단체이다. 향군 정관 제4조에서는 향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7호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8호에는 ‘국가 안전보장과 민족 평화통일에 기여’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 통일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향군의 기본 책무는 안보와 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제언하려고 한다. 첫째, 자유 통일은 강력한 안보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렇기에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여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향군은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둘째, 천백만 향군 가족들이 먼저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국민이 통일 열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돕지 않을 것이다. 향군 가족들이 통일 열망을 가지고 이를 주변에 적극 전파하여 국민 모두가 자유 통일의 열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향군 가족들이 먼저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 내용을 잘 숙지하고 향군의 국내외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전파하고 확산 시키며 지지를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이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향군이 중심 역할을 하기 바란다.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 확충 및 혁신 제언

윤진영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I. 서론

우리 군에서 예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력구성 비율 기준의 약 60% 이상 수준이다. 따라서 예비전력의 전투력이 곧 국가전쟁 승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개전 초 전장에 투입되는 주요 예비전력부대들의 전투력은 전장에서 전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쟁 지속에 따른 동원운영 및 시행계획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 총력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개전 초기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국민적 지지 속에 동원운영계획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겠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반전여론과 함께 동원기피 분위기가 조성되어 정상적인 국가동원운영 계획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될 우려도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 확충 및 혁신방향을 5가지 차원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① 무엇이 문제인가? ② 예비전력의 한계와 확충의 필요성 ③ 예비전력관리 사업예산의 혁신적 증액 ④ 병역자원 및 초급간부 전역증가에 따른 예비군 전력 강화 ⑤ 지역예비군부대 운용 혁신 등 실태를 기반으로 차원별 개선방안을 제시 및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내용들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국방과 군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도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임을 주지시킨다.

II. 미래 예비전력 정예화 확충 및 혁신

1. 무엇이 문제인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초연결·지능화를 지향하는 기술적 변화와 혁신은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 이와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첨단 무기체계 등장 및 정보·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과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¹⁾

1) 권태영·정춘일·홍기호, “신개념 무기체계 개념 발전을 고려한 부대구조 설계 연구”, (ADD 연구보고서, 2018. 5)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와 혁신의 중요성은 정책부서담당자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비전력 예산의 저조한 편성(국방예산의 0.4% / 2,075억 원 수준) 예비군부대의 장비 및 물자의 구형, 노후화, 단기훈련, 동원집행의 불확실 등 현재 우리의 예비군은 양적위주의 예비군 병력유지(상비군 50만, 예비군 240만 명)와 예비전력을 여분의 전력으로 인식 현안에서 간과(확충, 혁신, 예산 등)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시간 및 강도 부족(동원훈련 2박3일, 지역예비군훈련 20시간 등)으로 예비전력 정예화와 혁신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2. 예비전력의 한계와 확충의 필요성

장기 군 구조 발전 추진으로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을 뒷받침하는 예비전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상비전력과 대등한 작전임무수행 가능한 우수자원을 확보해야하고, 현재 평시 편성률(동원위주부대, 0~10%)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체가 있는 강한 예비전력의 이미지 전환으로 예비군의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다. 예비군과 예비전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기존 인식에서 탈피, 강한 교육훈련 체제로 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숙련도를 획기적으로 숙달시키고, 강한 교육훈련체제로 전환시키며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멀티플렉스형 훈련장 구성 및 설치를 통한 고강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단 구성 및 운용, 전략적 소통(SC) 개발 및 적용으로 국민의 신뢰와 군 내부의 동의, 예비전력 구성원들의 자긍심 강화전략도 필요하다.

3. 예비전력관리 사업예산의 혁신적 증액

최근 전쟁을 교훈삼아 개전 초기에 완전성을 갖춘 예비전력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전력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예비군 복무를 덤으로 생각하고 전투력 발휘의 의문과 더불어, 예비군훈련이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 무엇보다도 예비전력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와 역량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예비군훈련 보상비 기준 정립을 위해 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한 막연한 보상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비군훈련 적정 보상비에 대한 설득논리가 부족함에 따라, 국민의견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훈련보상비를 얼마만큼 책정해야 훈련참가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예비군 훈련보상비 기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른 최저임금, 실비, 보통 인부 노임단가 또는 현역 수준의 보상 등 막연한 산정 기준 적용으로 예비군훈련 보상비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훈련보상비의 획기적인 증가도 요구된다.

따라서 국민과 예비군들의 의견과 국방예산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비군

훈련보상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설득력 있는 논리개발을 통해 보상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향후 예비전력 예산 확보와 예산 편성의 기준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병역자원 및 초급간부 전역증가에 따른 예비군 전력 강화

현역간부지원자의 급격한 감소와 초급간부의 전역 증가로 전투력 유지 어려움에 따른 비상근예비군 복무체제 강화와 확대도 요구된다. 최근 국방의 핵심 문제로 부상한 현역 간부지원을 급감과 초급간부 전역자의 증가로 인한 간부 부족 사례는 예비군 강화 필요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현상은 보수 등 핵심적인 복지가 예비군 초급간부의 증추를 이루고 있는 상근 및 비상근 복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안보와 전투력의 중추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역사상 모든 전쟁은 소대장과 중대장, 부사관 등 초급간부의 자질의 격차에서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예비군 간부의 활용을 위한 현실적 대책 개발은 불가피하다.

5. 지역예비군부대 운용 혁신

미래 지역예비군 운용에 있어서 미래 지역방위작전에 운용되는 후방지역 통합방위작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통합요소 증가와 제반 작전요소 통합운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으로 효과성 증대²⁾, 열상관측장비(TOD), 민간 드론 등 감시수단과 주민신고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한 정찰감시 강화, 민·관·군·경 작전요소를 통합한 국가총력방위 개념 수행, 국가동원 요소, 재난 통제 및 피해복구 관련요소, 언론매체와 비정부기구 등의 작전요소를 작전활동에 통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달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통합방위작전요소와 협조 작전이 이뤄져야 하며, 또한 예비군 운용개념 발전에 따른 전력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예비군작전은 사회안전망과 연계한 시·군·구 단위의 상시 방호시스템 발전과 행안부·경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운용 중인 사회안전망 체계를 이용하여, 민·관·군 통합 방위체계 구축을 통한 감시·정찰용 드론 및 드론봇 운용 확대로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예비군 역할보장을 위한 전력증강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한다.

III.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혁신 제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 예비전력의 확충과 혁신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 ② 예비전력관리 사업예산의 혁신적 증액 필요성

2) 국방대학교, 『예비전력 정예화와 미래혁신』, (2019), p. 106.

인식, ③ 미래 예비전력의 정예화 확충 및 혁신을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

첫째, 예비전력의 확충과 혁신의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위해서는, 미래전에 대비한 전장의 영역 확장, 하이브리드전 등 새로운 전쟁양상 대비, 국방전략 구현으로 첨단 능력 기반 동시방위전력 구현, 최소 피해 및 최대 효과 달성, 국민·국방이 함께하는 예비전력 혁신·확충방안이 요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예비전력관리 사업예산의 혁신적 증액을 위해서는, 실제 있는 강한 예비전력 이미지 전환을 위한 정당한 보상 및 전략적 소통의 강화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예비전력조직 구조로의 변화를 위해서 예비전력 구성원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비 지급을 정책적으로 시행하며,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예비전력의 정예화 확충 및 혁신을 위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를 응원할 경우 더욱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물론 관련기관 및 언론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SC)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방의 중추전력인 예비전력의 실질적인 혁신과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연구와 관련 정책부서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의의와 각오

이 영 석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오는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11월 3일에 있었던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계승하여 그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53년 ‘학생의 날’로 처음 제정되었다. ‘학생의 날’은 유신정권 때 폐지되었다가 1984년 국가 기념일로 다시 지정되었고, 2006년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원인은, 192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나주로 통학하는 한 기차 안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기차에 타고 있었던 조선 학생들은 일본 남학생들이 조선의 한 여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남학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한·일 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번졌다. 중요한 것은 일본 경찰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 학생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면서 조선 학생들은 처벌까지 하였다. 이에 조선 학생들은 분노했고 결국 학생들은 광주 시내로 나와 조선인에 대한 차별 중지와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광주지역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동맹 휴학까지 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학생시위는 점차 확산되어 서울과 대구 등 전국 곳곳으로 번져 나갔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1929년부터 1930년까지 5개월 간 조선의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시위를 벌였다. 전국적으로 약 200개의 학교에서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일제 강점기 3대 독립운동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에 일본은 조선 학생들의 시위를 강력히 탄압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체포, 구금되었으며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러함에도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을 이어갔다. 결국 일본의 가혹한 통제와 제재로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진압됐지만, 당시 조선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은 조선인들에게는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립에 대한 불씨를 불어넣었다.

이 당시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이라 여기며 주변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상이었다. 대부분 노동자나 농민들이었는데 비해 비록 수적으로는 적었으나, 어떤 조직보다 공감대를 이루기 쉬웠다. 이뿐만 아니라 타 조직에 비해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입수가 빨랐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며,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동참으로 쉽게 단결할 수 있었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식민지 차별교육은 물론, 사회에 전반적으로 횡행하는 가혹한 처사에 분노하고, 이러한 일제 식민통치의 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의감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대중에게 알림은 물론, 식민지배의 잘못을 시정하고 나아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일제는 조선 학생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하였으며, 조선 학생들은 동맹 휴학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목적으로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나갔다. 학생비밀결사조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각 학교단위로 결성된 독서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의 비밀 결사대였다. 이 결사대는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지역단위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동맹 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주로 학교단위로 동맹 휴학을 전개할 계기가 되었다. 전국적인 조직보다는 학교나 지역단위로 추진해야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고, 결속력이 빠르며 일반 주민과의 연계와 호응 등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반의 학생조직은 공개조직과 비공개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공개조직은 서울의 조선사회과학연구회가 있었고, 비공개조직은 학생야체이카(서울), 조선학생혁명당(서울), 조선학생전위동맹(서울), 신우동맹(대구), 성진회(광주) 등이었다. 이 중 광주지역의 비밀결사대인 성진회와 독서회 중앙부는 광주지역의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광주지역 학생단체는 성진회, 소녀회 및 독서회 이렇게 3개가 있었다. 성진회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직이다. 1926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인 왕재일과 장재성, 광주농업학교 학생인 박인생 등은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진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비밀리에 결성하였으며,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실천방법을 토의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 성진회는 결성한지 5개월 만에 비밀누설 우려로 표면상으로 해체됐지만, 뒤에도 각 학교단위로 활동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지속하였다.

소녀회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독서회로서 일찍이 1928년 11월 초순에 결성하였다. 이들은 광주사범학교 뒷산에 모여 단체를 조직하였고, 매월 한 번씩 모여 사회과학을 연구하기로 결의하였다. 회원은 장재성의 누이인 장매성을 비롯하여 박옥련, 고순례, 장경례, 암성금자, 남협협, 박계남, 박채희, 박현숙, 김금연, 김귀선 등으로 광주

학생운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독서회는 1929년 6월 중순 동경 중앙대학 예과에 유학했던 장재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광주로 돌아와 광주고보, 광주사범, 광주농교의 학생들과 김기권의 집에 모여 중앙부를 결성하였다. 이후 각 학교별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민족문화와 사회과학 연구를 통해 민족의식 함양에 집중하였다. 특히 학생들을 통솔하고 지도하여 조직을 계속 확대해 나갔으며, 이 영향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광주학생항일운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첫째, 광주학생운동은 새로운 항일투쟁의 방식이었다. 기존의 동맹 휴학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조선인 본위교육, 자치권 획득 등 교과과정이나 식민지 교육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민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독립투쟁이었다. 전남청년연맹의 주요 간부들은 신간회에서 파견된 간부들과 전국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위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일제 식민통치를 전면 부정하는 일종의 독립운동 성격이었다.

셋째, 국내의 민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학생운동의 차원을 넘어 전 조선인이 단결하여 ‘타도 일본 제국주의’를 구현하자는 주장이었다. 이후 운동이 진행되면서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의 구호로 발전하였다.

넷째, 조선인 전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참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학생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김성민은 ‘광주학생운동’이라는 박사논문을 통해 초등학교 시위는 3·1운동 당시 극히 일부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참가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였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은 민족적 운동으로 확산되었음은 물론, 중국 상해지역의 독립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필자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이야말로 국가의 중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학생들이 모든 것을 바친 처절한 독립투쟁이었다고 진단한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즈음하여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본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